

드론축구, 국내 넘어 세계로 도약한다

우범기 전주시장, 드론축구 세계화·신산업 육성·국제교류 등 위한 미국 방문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 세계화와 신산업 육성, 국제 교류 강화 등을 위해 7박 10일간의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전주시는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4에 전시·출품되는 드론축구를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우 시장은 먼저 현지시간으로 9일과 10일 이틀간 드론축구 중주도시인 전주시를 대표해 CES 2024를 참관하고, 드론축구 홍보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미소비자기험협회(CTA)가 주최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모바일월드프로그레스(스페인),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독일)와 함께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로 꼽히는 국제적인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올해 전시회에는 구글과 인텔,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들을 비롯해 삼성과 LG, 현대모비스 등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 등 전 세계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미래산업 기술의 트렌드를 주도할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를 선보이게 된다. 드론축구는 시가 지난 2016년 캠퍼스종합기술원과 함께 드론과 탄소,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미래 스포츠로서,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개발까지 완료된 상태다.

시는 이번 CES 2024의 메인 전시관인 Tech East LVCC Hall에 홍보관을 설치해 행사장을 찾은 세계인에게 드

론축구의 우수성을 소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드론축구용품 제작 기업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Tech West Venetian Expo에는 드론축구 경기장도 설치돼 드론축구 국제 친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CES 2024에서 드론축구 전시·홍보관 운영 외에도 '드론축구' 신제품 론칭쇼와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선포식' 등을 통해 드론축구의 국제적 흥행몰이와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우 시장은 이어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해 오는 11일 LA 한인회와 △'2024 전주 해외마케팅 원년의 해' 지정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드론축구 붐 조성 △차세대 한인 문화체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오는 12일에는 LA시청을

찾아 IT·벤처의 새로운 이상향이자 글로벌 기술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실리콘밸리'의 성공 사례와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 육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LA지사를 방문해 마케팅 협력과 상품개발 및 판매 촉진 등 해외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논의하게 된다.

끝으로 우 시장은 오는 13일과 14일에는 게이티센터(미술관)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LA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등의 현장 시찰을 통해 전주시립미술관 건립과 영화영상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 접목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4 전시·출품은 드론축구가 국내를 넘어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강한 경제 전주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오는 12일에는 LA시청을

전주시 덕진구,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강화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덕진구는 8일부터 19일까지 설 성수식품인 떡류·두부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과 판매 행위 △원료와 완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적절성 △위생적 취급기준 △영양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는 떡류,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 등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산가, 보존료, 식중독균 등 검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것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수거장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덕진구는 8일부터 19일까지 설 성수식품인 떡류·두부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과 판매 행위 △원료와 완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적절성 △위생적 취급기준 △영양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이다.

또한, 이번 점검과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는 떡류,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 등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산가, 보존료, 식중독균 등 검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것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수거장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도시계획 규제 개선 이어간다

전주시, 올해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전주시가 2024년 갑작스런 새해에도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합리한 규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변화된 시대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시 받아야 했던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시작으로 민선8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써 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지난 1997년도에 결정된 이후 거의 변경 없이 유지해 오고 있던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 여건과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선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년간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왔다.

대표적으로 각각 지난 2001년과 2004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운영된 전주시 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정 최대한도로 상향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30%에서 250%, 상업지역 용적률은 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높여 일반주거지역을

기존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완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후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3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4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 개발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에 문제가 없도록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기준과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해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 위치한 역사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풀고,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종래지관과 전라감영, 전주부성 복원·동문·서문 및 성곽 복원 예정지를 제외한 건축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되고, 다양한 업종이 입점할 수 있게 되면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개발 장벽을 낮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가고,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5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전주시민들을 위한 예술공간이자 새로운 문화관광거점으로 지어질 전주시립미술관이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화·예술과 건축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립추진위는 2년간 전주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립추진위의 주요 자문 사항은 △시립미술관의 특성화 및 콘텐츠 구성 △시립미술관의 공간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 의견 논의 △소장품 수집과 관련된 방향성 제시 등으로, 건립추진위는 꾸준한 회의 및 자문을 거쳐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시는 이날 건립추진위의 첫 회의를 거쳐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을 위원장으로, 김상재 호서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일원에 건립되는 전주시립미술관은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어린이 갤러리, 수장고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 전주시립미술관 완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시립미술관을 전주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자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전국에서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미술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시민홍보대사 공개 모집

31일까지 전주 매력 발굴·홍보 10명

전주시가 시민홍보대사와 함께 전주의 생생한 매력을 발굴해 알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현지인으로서 본인이 사는 동네의 이야기를 발굴해 글·사진·그림·만화로 표현하고, 이를 개인 SNS에 게재하는 등 전주시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참여할 2024 전주시 시민홍보대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홍보대사에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10명이다.

시는 접수된 지원서를 토대로 전주에 대한 이해도와 지역 기반성,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활용도를 기준으로 홍보대사를 선별할 예정이다.

입기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월별 활동에 따른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특히, 시는 올해 시민홍보대사를 활용해 일정 권역(구도심,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동네의 매력적인 장소·인물·사건이나 시기별 시정 소식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민홍보대사들은 발굴된 동네의 매력과 시정 소식 등을 개인 SNS에 게재하며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 시민홍보대사가 되고자 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kssl10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81-502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영